

#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8.

발 의 자 : 이해식 · 한병도 · 황명선  
박정현 · 정을호 · 위성곤  
서영교 · 이기현 · 박상혁  
윤준병 · 김원이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홉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,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,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).



##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철도안전법」을”을 “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철도안전법」을”로 한다.

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1조의3(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완화 등)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,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.
-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, 혼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도시 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「 <u>철 도안전법</u> 」을 적용한다.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- -----이 법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 <u>철도안전법</u> 」을-----.
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① ~ ⑦ (생    략) <u>&lt;신    설&gt;</u>	제22조(정부 지원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<u>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 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<u>&lt;신    설&gt;</u>	<u>제41조의3(도시철도의 혼잡도 측 정 및 완화 등) ① 도시철도운 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 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 시철도,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 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 결과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위</u>

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
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  
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 
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혼  
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, 혼  
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